

금남로에서



정 후 식
논설실장·이사

평소 이동 수단으로 BMW를 애용한다. 출퇴근은 물론이고 행사나 약속이 있어 도시 내 먼 거리를 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최근 잇단 화재로 논란에 휩싸인 외제차 BMW를 몰고 다닐 만큼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 버스(Bus)와 지하철(Metro)을 타고 걷기(Walking)를 생활화한 사람들을 언제부턴가 'BMW족'이라 부르는데 그 일원인 셈이다.

한 차례의 이동에 하나의 수단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10여 분을 걸어 나와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로 향한다. 경우에 따라 환승도 한다. 요즘엔 대중교통 앱(App)과 버스정보 단말기, 환승 시스템이 발달해 교통카드 하나면 웬만한 곳은 다 찾아가 수 있다. 게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주차 걱정할 일이 없다. 그중에서도 지하철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빠르게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좋다.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병행하면 교통 체증을 피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한 몫할 수 있다. 자투리 독서도 가능하고 사색을 즐기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정류장에서 최종 목적지를 도보

대중교통, 진정한 ‘시민의 발’ 되려면

로 오다가 보면 하루 1만보 걷기도 나쁜하다. 90대의 국민 MC 송해나 금융감독원장 윤석현 같은 이들이 BMW족임을 자처하는 것도 이런 매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광주에서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시내 버스의 경우 배차 간격이 길고, 노선이 구도심에 집중돼 시각지대가 많다. 서비스가 나아지고는 있지만 승강장을 그냥 지나치거나 승하차 거부, 배차 시간 미 준수, 난폭 운전으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여전하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00년 50만 5000명에서 지난해에는 36만 9000명으로 급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제 역할 못하는 버스와 지하철

지하철 역시 도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단일 노선이다. 그나마 유동 인구가 많은 신도심, 버스터미널, 광주시청 등은 직접 연결하지 못한다. 1호선이 순환선인 2호선을 전제로 건설된 탓이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외곽 택지지구로 이동하려면 환승 시간을 포함해 1시간 30분 이상 걸리기 일쑤다. 그러니 광주가 갈수록 '승용차 도시'로 바뀌어 가는 것이다.

현재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승용차가 40.9%로 가장 높다. 시내버스(33.5%)와 지하철(3.6%)을 합쳐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1호선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승객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시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을 시민들에게 묻는 공론화 절차가 마침내 시작됐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로 오는 23일까지 2주간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이들 가운데 찬반 비율과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250명을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찬반 양측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 속의 과정을 거쳐 다음달 9~10일 집중 토론회와 최종 투표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때문에 찬반 양측의 홍보전도 치열하다. 거리 곳곳에 플래카드가 내걸리는가 하면 홍보 전단을 통한 여론 물이도 한창이다. 반대 측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호선을 신설하면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져 교육·복지·일자리 등 다른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예산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는 BRT(급행 간선 버스)나 노면 전차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찬성 측은 2호선 예산 가운데 60%인 1조 2347억 원이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8232억 원만 광주시의 부담으로 재정 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BRT에 대해서는 도로 중앙 2~3개 차선에 시내버스만 다니게 하는 교통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설 설치와 도로 개선으로 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진다고 맞서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2호선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찬반 양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와 사례, 논리들을 앞세우다 보니 여론이 왜곡될 소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에 찬반 의견을 올렸다가 상대 측으로부터 무참하게 매도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들에게 정확 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공론화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광주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의 교통 편의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달거나 정책이 아닌 정치적 접근이 되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2호선은 지난 2002년 기본계획 확정 이래 16년 동안이나 건설 여부는 물론 운행 노선, 건설 방식, 차량 형식 등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돼 지역민의 피로감이 적지 않다.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로 결론을 내리고 그에 승복하는 일만 남았다. 아울러 어느 쪽이든 그 결론을 바탕으로 도시 확장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대중교통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미래 광주를 위한 길이다. /who@kwangju.co.kr

은펜칼럼



옥영석
농협 하나로유통 팀장

두해 전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공공기관에 다니던 선배가 퇴직했다. 나름 모아둔 돈도 있고 아이들도 학교를 마쳤으니 제 갈 길 알아서 가라라고 생각한 선배는 귀농을 하기로 했다. 고향에 아직 정정한 부모님이 계시고 부질 만한 전답도 있는데, 어릴 적부터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거들어온 터라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주말마다 같이 만나 운동을 즐기던 파트너가 없어졌으니 두어 달 섭섭하기도 했지만 누구나 가야할 길이고, 몇 년 후면 나 역시 같은 길을 따라갈 터이니 안부 삼아 전하라는 게 웬일이었나.

봄여름이 지나고 가을까지만 해도 활기 넘치던 선배의 목소리는 점점 지치고 힘겹게 들려왔다. 젊어서도 안 하던 농사일이며, 시댁살이도 하기 싫은 아내가 한사코 귀향을 마다하니 그는 혼자서 고향으

청년농 지원금 논란을 보며

로 갈 수 밖에 없었다. 팔손 노모는 남편만 챙기기도 힘든 나이에 받은 홀아비가 된 아들을 수발하는 것이 너무 힘겨웠고, 영농비며 생활비는 들어가지만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올 리 없는 수입도 이런 저런 갈등만 키웠다. 결국 두 해를 못 넘기고 선배는 서울로 돌아와야 했다. 30년 넘도록 흰 셔츠에 타이를 매었던 신사가 햇볕에 그을린 거무스레한 얼굴로 다시 나타났을 때는 몇 년 후 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측은하고 두려운 마음이 일었다.

통계청과 농촌경제연구원 의 청년 농가 추이와 전망에 따르면 18년 전 9만 2000명에 달하던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가 2010년엔 3만3000, 2017년에는 다시 3분의 1이 줄어 9300명에 불과해졌고, 2025년이면 3700여 명 수준에 머물 것 이란단.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에 접어들지 오래이니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건 옛 얘기가 되었고, 청년농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섬짓할 지경이다.

40세 미만 농업인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6.6%였으니 예전엔 100농가 중 6~7명이었지만, 2017년엔 0.9%에 불과해 100농가에 1명도 안된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사라져 사

없는 농촌이 될까 두려워진다. 이를 여류 한국잡력과 농민신문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들이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바로 '돈'이었다. 자금 부족(33%), 노동력 부족(27%), 판로 확보와 마케팅(18%), 자연재해 등 영농의 불확실성(10%) 순이다. 농사를 시작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도 경영 자금 확보나 농지 확보 등 경제적 애로가 가장 크다니 올해 도입한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제도는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청년층 유입을 위해 40세 미만 청년농에게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 하는 이 사업은 선정 예정 인원의 3배에 이를 만큼 지원이 치열했고, 당초 1200여 명에서 400명을 추가 선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법도 했지만 내년에 2000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후계농 육성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지원을 해왔지만 오죽하면 가계 자금까지 지원하게 되었을까 싶도록 청년농 부재의 위기감이 컸던 탓이다.

며칠 전 우감산계급대 청년농에게 지급된 영농 정착 지원금이 백화점 명품 구매와 외제차 수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

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년농들이 사용한 영농 지원금 44억 2000만 원중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마트와 편의점(26%)이었고, 소풍(20.7%), 음식점(17.9%) 순이었다. 소풍 가운데 명품 구매를 위한 200만 원 지출과 고급 가전·가구 구매, 면세점 이용 등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당국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는 정착 지원금을 받은 다른 청년농까지 찻पा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만들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려는 이 사업 자체를 위축시킬까 걱정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듯 자금의 용도가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 자금'임을 감안하면 마트와 편의점 이용 등 대다수의 이용 내역은 일상적 가계 자금이 해당하는 것이어서 부당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부정확한 사용은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안정적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때다.

기 고

장애와 선입견



박거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대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21.8%라고 한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가 온 것이다. 반려동물 하면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개가 아닐까.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할 때면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을 자주 목격한다. 반려견은 함께 있으면 즐겁고 위로가 되는 좋은 동물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반려견(犬)과 반대되는 개념의 선입견(見)이란 놈이 있다. 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다. 특히 장애에 대한 선입견은 독종이다. 대다수 장애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선입

견에게 물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선입견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 불평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건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arrier Free)이 꼭 필요한 이유다.

나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고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에 관심이 없었고, 솔직히 불편함을 느낀 적도 없었다. 3개월 전쯤 부장님과 함께 출장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부장님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 그날 사업체 방문 후 같이 먹었던 점심이 소화가 잘 안되었는지 계속 불편해 하셨다. 전남 지역에서도 꽤 인구가 많은 큰 도시였기에, 금방 장애인 화장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길보기에 규모가 크고 깔끔한 건물이었지만 정작 장애인 화장실이 구비

되어 있지 않았다. 주변에 있던 건물들 세 군데 정도 돌았지만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허탕을 치고 말았다. 점점 마음이 급해 할 수 없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대형 마트로 가기로 했다. 도심에서 흔하디 흔한 A마트로 향했다. 그런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B마트가 있어 바로 차를 돌려 빠르게 도착했다. 그런데 3층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화장실로 향했으나 역시 장애인 화장실이 없었다. 마트 직원에게 문의하니 1층에만 구비되어 있었다. 아찔한 1층까지 부장님을 모셔다 드렸고 문제는 해결되었다.

지금 되돌아봐도 머리가 핑 도는 아찔한 경험이다.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전국에 수많은 건물들이 이미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분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 화려한 건물에, 큰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당연히 장애인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리라는 생각도 내 선입견

이었다. 외견만 그럴싸한 대형 건물들,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A마트, 1층에만 있는 B마트 모두 선입견 때문에 사회적 배려를 간과한 점이 아쉽다. 한편 내 기억에 당시 부장님은 나와는 달리 꽤 차분하게 대응하셨다. 편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대기업 사업장에 분개하실 줄 알았으나 크게 동요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은 좌절을 겪으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체념해 버리신 건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공단에서는 사업장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지사별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모니터링도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선입견에서 시작된 '장애물 있는' 생활 환경은 이미 우리 사회에 퍼져 있다. 장애에 대한 선입견은 나쁜 것이고 없애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아니 노약자 등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社 說

교육공무원 범죄 왜 이토록 끊이지 않나

놀랍다. 최근 5년간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 131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더니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범죄 백화점' 수준이라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음주 운전이나 도박은 예사였고 남녀 간 부적절한 관계나 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이들은 뇌물수수, 사기, 공금횡령 심지어 아동 성추행 범죄까지 저질렀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 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육 공무원은 광주 45명, 전남 86명이다. 같은 기간 경찰 수사를 받은 광주·전남 교육청 공무원도 무려 1138명에 달했다. 이러한 이들의 범법 행위는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1명이 해임됐으며 성인 대상 성추행 사건의 경우 1명

이 파면되고 1명이 해임됐다. 그러나 다중 밀집 장소 성추행 사건의 경우 1명이 징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도 교육청의 경우도 아동 성추행으로 1명이 해임됐고 1명은 징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성인 강제 추행 사건으로 역시 1명이 징적 3개월을 받았다.

문제는 광주·전남 교육청이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들쭉날쭉한 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든 예처럼 시교육청은 성추행 공무원 3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는데, 도교육청은 징적 3개월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른 교육 공무원 가운데 극소수만 공직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교육청이 제 식구 챙기기로 온정을 베풀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솜방망이 징계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일반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기 어렵다고 남은 반찬 다시 사용해서야

광주 지역 음식점에서 밥이나 반찬 등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사례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한다.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가 및 종업원 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일부 식당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잔반을 재활용하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원 박 모(46) 씨는 최근 광주 구도심에 한 포장마차형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이 남긴 찜장을 재활용하는 것을 보고 비위가 크게 상했다는데, 다른 식당에서도 잔반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이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각 자치구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매달 한 건에서 세 건까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식품 접촉요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는 서구가 세 건, 남구와 북구가 각각 한 건 다섯 건에 그쳤다. 민원 제기에 비해 단속 실적에 저조한 것에 대해 각 구청은 담당 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잔반 재사

용이 의심되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15일에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심의 한 포장마차형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이 남긴 찜장을 재활용하는 것을 보고 비위가 크게 상했다는데, 다른 식당에서도 잔반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이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각 자치구에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매달 한 건에서 세 건까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식품 접촉요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는 서구가 세 건, 남구와 북구가 각각 한 건 다섯 건에 그쳤다. 민원 제기에 비해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각 구청은 담당 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한 데다 잔반 재사

無 等 鼓

가을 바람이 서늘하다. 언제 그렇게 더웠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계절이 바뀌었다. 올해 여름은 최고 기온과 최장 열대야 등 그 동안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정말 무더웠다. 그래서인지 올해 가을바람은 더욱 시원스럽게 느껴진다. 혹독한 무더위를 이겨 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다시 가을이 왔다는 결실을 이루어 냈다는 의미가 이번 가을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욱 반갑다.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9월 평양공동선언'

의 이행을 위해 남북은 '가을이 왔다' 공연을 보내고 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현지 조사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인 이번 가을은 한반도 평화라는 더욱 풍성한 결실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이날 중 열리게 될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은 서울은 물론 빛고를 광주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을이 왔다' 공연은 지난 4월 남측 예

의 이행을 위해 남북은 '가을이 왔다' 공연을 보내고 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와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 공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현지 조사 등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인 이번 가을은 한반도 평화라는 더욱 풍성한 결실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특히 이날 중 열리게 될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은 서울은 물론 빛고를 광주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을이 왔다' 공연은 지난 4월 남측 예

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내년에 국제 스포츠 행사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6년 '6·15 민족통일대추전'도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봄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요 가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이다. 올 4월 '봄이 온다' 평양 공연으로 남북 화해의 씨앗이 뿌려졌으니, 이제 '가을이 왔다' 광주 공연으로 남북 평화의 결실이 맺어졌으면 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영문)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직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직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0-0195)
정 치 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예 행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세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